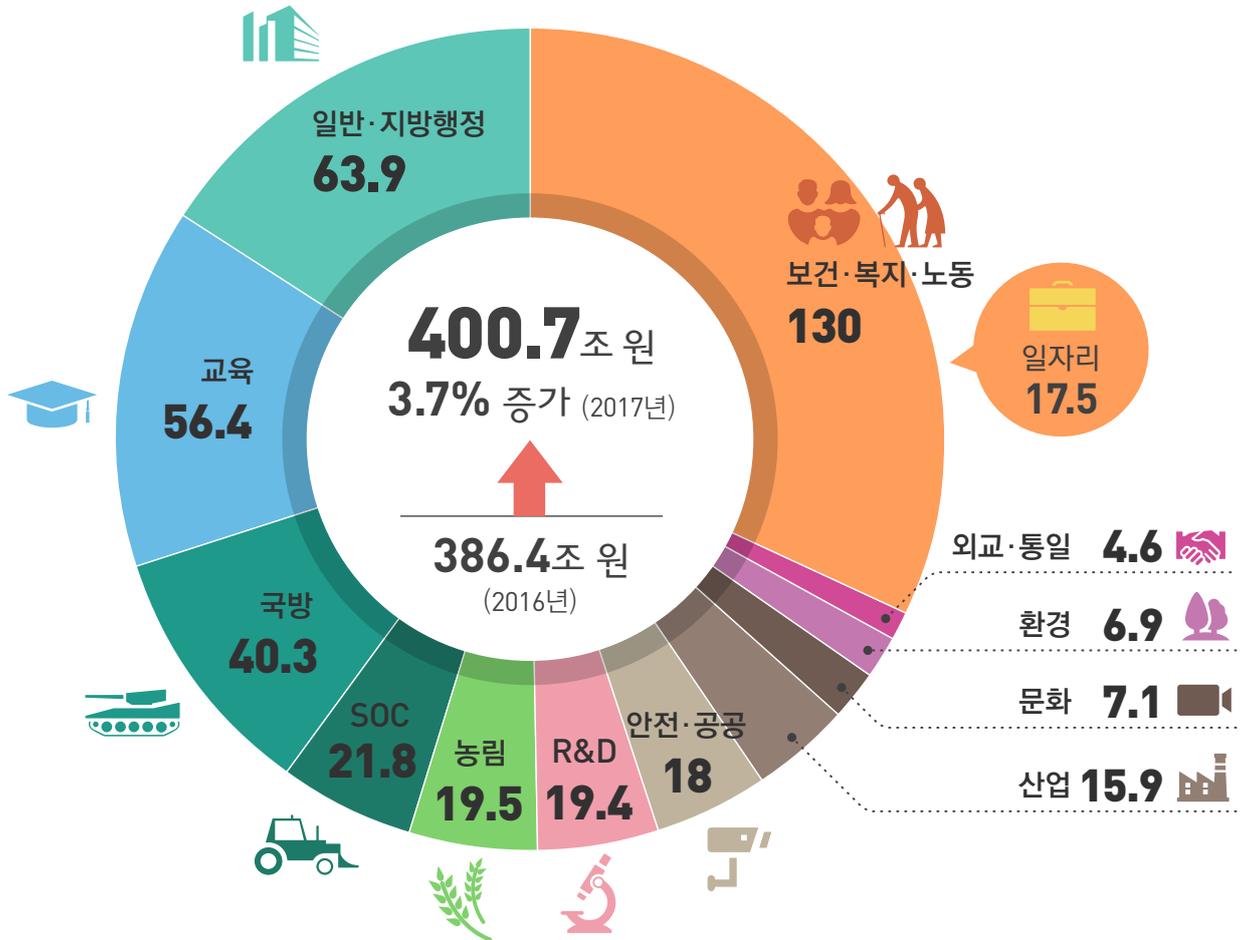


일자리 우선!, 경제활력 우선! 2017년 나라살림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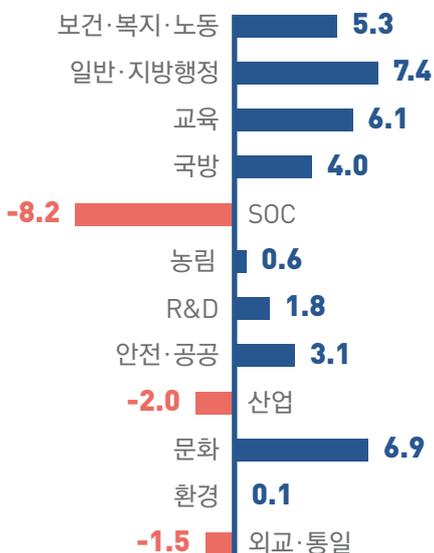
분야별 자원 배분 및 증감률

(단위 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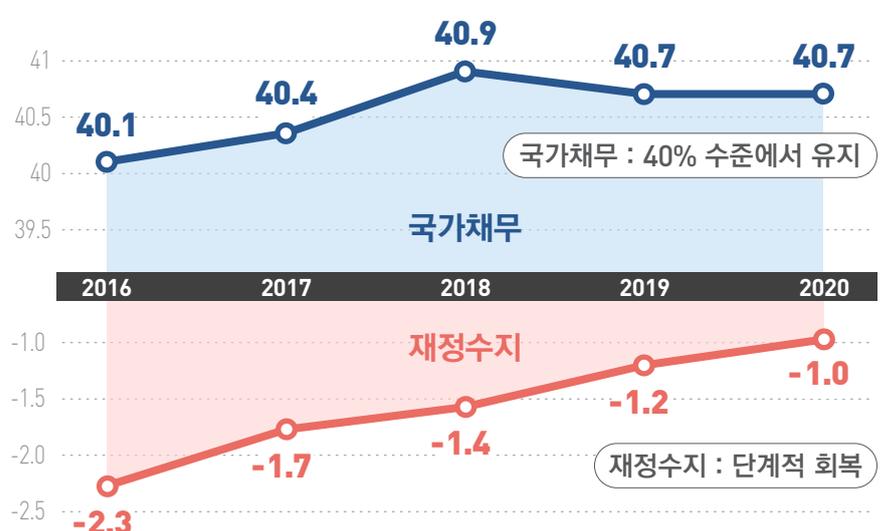
· 중장기 재정 건정성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“최대한 확장적” 편성



증가율 (단위 : %)



재정수지·국가채무 비율 전망 (GDP 대비, %)



1. 일자리 우선! 경제활력 우선! 2017년 나라살림 예산

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

01.

일자리 투자확대 · 효율화



일자리 예산 17.5조 원
전년대비 10.7% 증가



고용장려금 16 → 6개
창업지원 33 → 20개 통합



고용복지+센터
70 → 100개소



대학 창조일자리센터
40 → 70개



일자리종합포털 구축
107억 원

02.

청년 일자리 확대



청년 일자리 예산 2조 원
전년대비 15.7% 수준 증가



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
게임 635억 원 / VR 192억 원



창업성공패키지 도입
500개 팀, 500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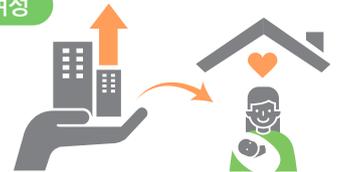


일학습병행제 기업
6,300 → 10,000개

03.

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
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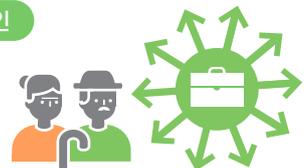
유연·재택근무 도입기업 지원
20 → 40만원

장애인



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신설
1만 명

노인



기업연계형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
5만 개 확대

2. 일자리 우선! 경제활력 우선! 2017년 나라살림 예산

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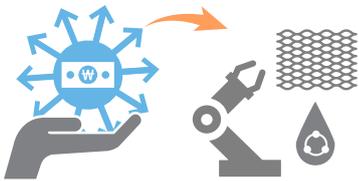
03.

0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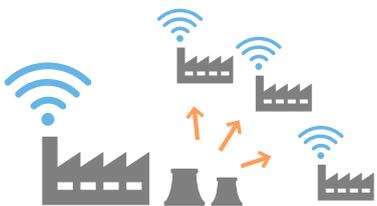
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



9개 R&D 국가전략프로젝트
총 1.6조 원 ('17년~'26년)



27개 지역전략산업
총 3.1조 원 ('17년~'19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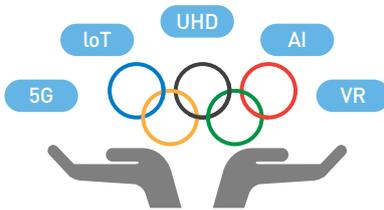
스마트공장 대폭 확대
1,245 → 1,750개

02.

문화융성



문화벤처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
188 → 400개



문화·ICT 올림픽 지원
405억 원



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 신설
45억 원, 9개

수출·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



수출바우처 신규 도입
+ 수출지원 앱 개발 1,786억 원



중견기업 전용 R&D 자금 신설
60억 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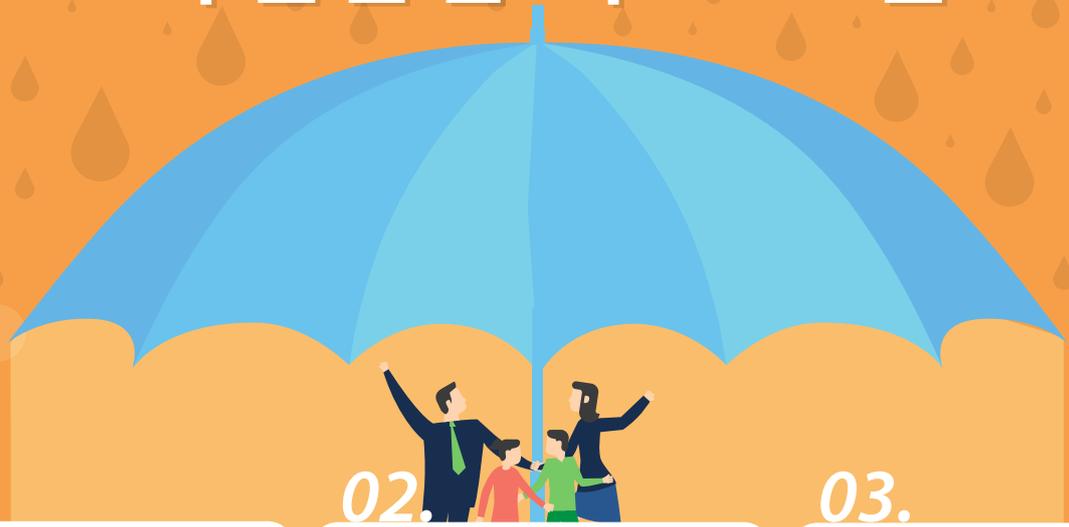
지방상수도 개량 지원
22개소, 512억 원



지방재정 대폭 확충
9.2조 원 증액

3. 일자리 우선! 경제활력 우선! 2017년 나라살림 예산

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



0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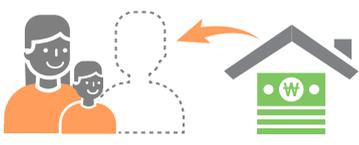
저출산 극복 지원



난임 시술비 지원
저소득층 → 전 계층



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
단독 3 → 4억 원 / 공동 6 → 8억 원



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
월 10 → 12만 원



'아빠의 달' 지원
첫째아 150, 둘째아 200만 원

02.

맞춤형 복지 확대



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.2% 인상
월 127 → 134만 원



행정복지센터
700 → 2,100개소



잠복 결핵 검진
1 → 77만 명



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
296억 원

03.

국방·치안·안전 강화



병 봉급 2배 인상 완료
상병 기준 19.5만 원



군인복지 향상
에어컨, 아이스조끼, 이동식 화장실



국가관리시설 내진 보강
824 → 1,802억 원



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1.5만 대,
하이브리드차 5만 대, 수소차 200대

4. 일자리 우선! 경제활력 우선! 2017년 나라살림 예산

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반 마련



재정효율성 제고



재량지출 구조조정

- 재량지출 10% 수준 감축
→ 일자리 등에 재투자



유사·중복 통폐합

- '15~'16년 총 689개 사업 통폐합
- '17년 예산안 205개 추가 감축



재정사업평가 강화

-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, 3년 이상 보조사업 연장평가
- 재정사업평가 결과 '미흡'시 감액

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



재정준칙 도입

- 채무준칙 (국가채무 GDP 대비 45%이내)
- 수지준칙 (재정수지 ▲3% 이내)
- 재정수반 법률안 비용추계서, 재원조달방안 첨부



재정건전화계획 수립
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의무화



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

- 사회보험 정책협의회 구성
-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 실시